

살면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요약본

Module 2. 말 못할 고민, 채무 해결하기

형사고소를 활용한 민사분쟁의 해결

- 1) 형사고소의 개념
- 2) 사기죄의 이해
- 3) 배상명령(賠償命令)제도
- 4) 고소장 작성방법

1. 형사고소의 개념

1) 고소의 의의

가. 고소의 의의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권자 : 고소는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를 고소권자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고소권자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 있다.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의미하며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한다.

나. 구별개념

가) 고발(告發)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수사(搜查) :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고소가 제기되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의 하나이다.

2)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차이

형법은 무엇이 범죄인지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형법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형법을 적용, 실현하는 절차가 형사절차이며 이 절차를 규정한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반면에 민사절차는 개인의 민사적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적 입장에서는 민사적 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절차를 의미하며 민사소송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3) 고소의 방법

가.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이 사건의 관할기관이 된다.

※ 피고소인 : 고소의 상대방,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한다.

나. 고소의 대리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물론이고 친구나 친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 고소의 기간

원칙적으로 고소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다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친고죄(親告罪)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혼인빙자간음죄, 모욕죄 등이 주요 친고죄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고소와 친해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나 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다.

라. 고소의 제한

가) 간통죄를 이유로 한 배우자의 고소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적어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 친고죄에서 공범 중 1명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의 내연녀만을 벌하고 싶어서 고소를 한 경우 남편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성폭력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다.

라)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한 피해의 회복이 되기 전에는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고소이후의 절차

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의 적법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고소에 관할위반 등의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 중에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나.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도 한다.

다. 경찰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끝이 나면 사건기록을 사건 담당 검사에게 송부한다. 담당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사가 있으면 진행하고 필요한 수사를 다 마친 후에는 사건에 대하여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약식기소를 하기도 한다.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소인이 도주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하여 참고인의 증언이 필요한데 참고인이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

※ 기소 : 검사가 법원에 범인을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결과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불기소라고 한다.

라.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는 법원에서 검사와 피고소인을 불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범인을 기소한 이후부터는 범인을 “피고인”이라 칭하고 기소하기 이전까지는 “피의자”라고 칭한다.

2. 사기죄의 이해

1) 사기죄의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빼앗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절도죄나 강도죄가 고전적인 범죄임에 반하여, 사기죄는 경제적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사기죄의 법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기죄의 구성요건

범죄의 성립요건을 법률용어로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가. 다른 사람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나.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예컨대 돈을 돌려 줄 생각도 없으면서 1억을 빌려주면 1달 뒤에 1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다. 기망을 당한 사람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돈을 교부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처분행위인 것이다.

처분행위는 기망을 당한 사람이 하여야 하고, 기망을 당한 사람이 그와 같이 처분행위를 한 원인이 기망행위 때문이어야 한다.

예컨대 돈을 돌려 줄 생각도 없으면서 1억을 빌려주면 1달 뒤에 1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속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형편을 익히 알고 있어 불쌍한 마음에 1억원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기망행위 때문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1억을 빌려주면 1달 뒤에 1억 5천만원을 갚겠다고 하여 1억을 빌렸지만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1달 뒤에 1억 5천만원을 줄 의사로 빌렸다면 사기가 아닌 것이다.

이 경우 진실로 돌려 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무상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판단한다. 이미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1억을 빌린 경우라면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돈을 빌리고 난 후의 행동도 중요하다. 갚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명백히 보이는 경우와 돈을 빌린 후부터 전화도 받지 않고 몰래 이사까지 한 경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배상명령(賠償命令)제도

1) 의의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범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나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되었다. 즉 피해자는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는 것이다.

2)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및 과실치사상죄, 절도죄와 강도죄, 사기죄와 공갈죄, 횡령죄와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된다.

3) 배상명령의 범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의 배상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4)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때, 배상명령으로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5) 배상명령의 절차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게 되는데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한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된다.

(아래뉴스 내용은 관련 뉴스보기 형태로 삽입 바랍니다)

[법률뉴스] '돌려막기' 수법 187억 사기 30대 여성 실형

A의 투자금으로 B의 투자원금과 수익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웃 주민 21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수억원씩 모두 187억원을 받아 5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억90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3월 오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주부에게 "부동산매매법인과 건설시행사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다 월 3%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년여간 68차례 70억원을 투자받아 원금과 배당금으로 55억원을 지급한 뒤 15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국민일보 2009.07.02]

4. 고소장 작성방법

고 소 장

1. 고소인①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xxxxxxxx
주 소	서울 00 구 00 동 00 아파트 0 동 000 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 구 00 동 00 빌딩 101 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ngd@◇◇.co.kr		

2. 피고소인②

성 명	이 사 기	주민등록번호	5△△△△△ - xxxxxxxx
주 소	서울 00 구 00 동 00 아파트 0 동 000 호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900-0000		
이메일	leesagi@◇◇.com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③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④

-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주)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 2006.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동 00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00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6. 3. 10.경 컨설팅비로 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⑤

- 고소인은 00주식회사 00부에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 강00으로부터 2006. 2.초에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자신이 (주)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2006. 2.말경 고소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나온 좋은 매물이라면서 00상가를 추천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2006.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00상가의 주인이 다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상가 101호를 급히 매물로 내 놓았다.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00상가를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고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소인과 컨설팅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2006. 3. 10.경 00은행에 있던 고소인의 예금 중 1,0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그 날 14:00경 위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에게 컨설팅비조로 주었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주)00부동산컨설팅으로 피고소인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문의전화가 여러 통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00상가 관리사무소에 들러 확인해 보니 101호는 상가 주인이 팔려간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은 그 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증거자료⑥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⑦

① 중복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 조 무고죄⑧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9 년 7 월 31 일⑨

고소인 김 갑 동 (인).

○○지방검찰청 귀중⑩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⑪

성 명	강 00	주민등록번호	6△△△△△ - xxxxxxxx	
주 소	자택 : 서울 00 구 00 동 00 아파트 0 동 00 호			직업
	직장 : 서울 00 구 00 동 00 빌딩 00 회사			회사원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2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강 00 은 고소인의 친구이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컨설팅비를 요구하면서 00 상가를 싸게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2006. 3. 2. 고소인과 같이 들었음			

2. 증거서류⑫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컨설팅 계약서(사본)	피고소인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2	예금통장(사본)	고 소 인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3	영수증(사본)	피고소인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컨설팅비 1,000만원을 2006. 3. 10.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음

3. 증거물⑬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	----	-----	-------

1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고소인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2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3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① 고소인

서식과 같이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소는 실제 문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도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절차상 불이익을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피고소인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기재한다.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엄마”, “쌍문동 도끼” 등과 같이 별명, 예명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화번호의 경우도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전화번호라도 연락이 닿는 번호를 모르면 기재하고 언제 연락이 되었었는지를 기재한다.

③ 고소취지

고소의 결론 부분으로 서식과 같이 기재한다.

④ 범죄사실

핵심 피해내역만을 기재한다. 즉 앞서 배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만을 기재한다고 보면 된다. 즉 언제, 누가, 어떻게 나를 기망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의 어떤 재물을, 얼마만큼 빼앗아 갔는지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사건의 자초지정(自初至終)을 늘어 놓아서는 안 된다.

⑤ 고소이유

사건의 자초지종을 일일이 설명하는 부분이다. 피고소인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어 돈을 어떻게 빼앗아 가고, 지금은 연락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까지 자세히 기재한다.

⑥ 증거자료

고소장 본문의 간명화를 위해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별지에 기재한다.

⑦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해당사항을 정확히 체크한다.

⑧ 무고죄

무고죄(誣告罪)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정형도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실관계 중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여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⑨ 고소일자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6 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 등 고소의 기간과 관련하여 고소일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⑩ 고소장 접수처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접수한다. 검찰청으로 접수하더라도 다시 경찰서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일선 경찰들의 경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죄성립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의 경우 고소장을 검토해보고 개인간의 거래에서 돈을 떼인 경우로 판단되면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고소장을 접수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로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접수해 준다는 사실이다. 사기고소장을 접수할 일이 생기면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정치하게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접수단계에서의 해프닝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⑪ 인적증거

쉽게 말해 증인이다.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목격자라든가 사건관계인이 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소환하여 조사하는데 편리 하도록 주소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한다.

⑫ 증거서류

증거서류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정리하여 접수하되 관련 계약서 등은 절대 빠뜨려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한다.

⑬ 증거물

실제 범죄의 입증에 기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강간현장에서 찢어진 피해자의 옷이라든가, 현장에서 확보해 둔 각목 등이 그것이다.